

7월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본 자료는 입법현황과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보도자료 등을 자체요약한 것입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 1-1.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들어간다... '창덕궁 닮은꼴' 1
- 1-2. 세종시 바우처카드 기반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전국 최초 2
- 1-3. 세종 첫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 2
- 1-4. 민간 매각 멈춘 금강수목원... 충청남도 시민 개방 추진 3

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5
- 2-2.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6
- 2-3.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7
- 2-4.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8

3. 국회 입법 발의 현황

- 3-1~12. 지방자치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10~15

4. 국내 정책 정보 및 이슈

- 4-1. AI 법령 비서 서비스 개시. 공무원 행정 속도 높인다 17
- 4-2.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18
- 4-3.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9
- 4-4. 학교밖 청소년 모의 수능평가 응시료 지원 20

5. 국외 정책 정보

- 5-1. 예산을 끌어오는 지방정부의 기술 22

0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시작. '창덕궁 닮은꼴'

- 설계공모서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당선
- 특별자문회의 구성, 정체성·상징성 보완...내년 착공, 2029년 입주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가 본격화한다. 착공 시점은 내년 8월, 입주 목표 시점은 2029년 8월이다. 세종집무실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퇴임식이 세종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 당선작은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을 닮은 공간 구성에 전통적인 '채와 마당'을 배치해 한국적 풍경을 구현했다. 대통령과 참모진을 가까이 배치하고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인 동선을 적용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로운 구성 등은 보완할 과제로 제시됐다.
 - 행복청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설계 과정에서 문화·건축·역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회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설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 당선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설계공모 누리집(<https://president-compe.kr>)를 참조하면 된다.



1-2. 세종시, 바우처카드 기반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전국 최초

- 세종시가 바우처카드 기반의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어린이 집에 친환경쌀과 전통된장 등 2개 품목을 연 3차례 현물로 공급했으나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와 정해진 날짜에 수령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 시는 지난 3월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세종로컬푸드, NH농협은행 세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우처카드 기반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품목도 기존 2개 품목에서 친환경농산물, 비유전자변형식품 콩 가공품, 무항생제 이상 계란, 동물복지 축산물 등 150여개 품목으로 늘렸다.
- 이 사업이 정착하면 영유아 건강을 증진과 어린이집 이용 편의는 물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중부매일(<https://www.jbnews.com>)

1-3. 세종 첫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

-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은 물론, 대전센터의 상담 수요 집중으로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담 적체 현상까지 발생해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애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세종시의 인구 및 도시 기능 확대에 걸맞은 민생금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고 이후 관계기관들의 협력 속에 센터가 신설됐다.
- 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하며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알선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종합 신용상담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등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4. 민간 매각 멈춘 금강수목원... 충남도, 시민 개방 추진

- 도의회 업무보고서 재개방 방침 공식화... 구체적 시기·방식 검토

- 민간 매각을 위해 폐쇄됐던 금강수목원이 다시 시민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재개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시설 정비, 인력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 도 지휘부에 보고한 뒤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충남산림자원연구소장은 금강수목원 개방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어떻게 다시 재개방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으며 곧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 앞서 도는 기존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강수목원과 연구소 부지의 민간 매각을 추진해왔다. 금강수목원은 충남도 소유지만 2012년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부지가 세종시 행정구역에 편입됐다.
- 도는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 이에 따라 소유권은 충남도가, 개발 인허가권은 세종시가 갖는 구조가 됐다. 도는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박수현 충남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간 매각 중단과 수목원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면서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
- 박수현 충남지사는 금강수목원을 "수십 년에 걸쳐 충남도민의 손으로 가꿔온 모두의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며, 취임 이후 도는 민간 매각 절차를 중단했으며, 수목원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0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이유

-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정의)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 형제자매, 부 또는 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정착 지원)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 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주요내용

- 가업승계시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2.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개정 이유

-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3조(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기준)

1. 지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4조의 보행기 지원 금액은 1대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권자 : 90퍼센트
2. 차상위계층 : 80퍼센트
3. 그 밖의 노인 : 70퍼센트

주요내용

- 지원대상이 세종시보다 좀더 폭 넓게 되어있음.
- 지원비율을 상세히 적시하여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인식 할 수 있음.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2-3.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 · 개정 이유

- 이 조례는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정의)

1.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2.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초·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 활동)

1. 등·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학교 내 순찰 등 선도 활동
3.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홍보
4.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 제4조(지원 등)

-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학부모폴리스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되지 않는 경우

주요내용

- 봉사단체의 지원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함.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4.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개정 이유

-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내 용

○ 제2조(정의)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호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교통비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함.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03

국회입법

발의현황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장 및 이장의 업무 범위와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이에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 및 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대표발의자 : 복기왕 / 발의일 : '26.07.08 / 의안번호 : 2219843

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면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하여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그런데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근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도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단서).

대표발의자 : 배준형 / 발의일 : '26.07.02 / 의안번호 : 2219687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9호).

대표발의자 : 임종득 / 발의일 : '26.06.23 / 의안번호 : 2219431

3-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3-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대표발의자 : 김성원 / 발의일 : '26.07.14 / 의안번호 : 2219953

3-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교육의 전문성과 인물의 도덕성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내세워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이 없으니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게 됨.
-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대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대표발의자 : 최은석 / 발의일 : '26.07.06 / 의안번호 : 2219779

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을 최대 75만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실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규모도 크지 않아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수준을 놓어준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9항 신설 등).

3-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 환경·생활기반과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음.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

대표발의자 : 김용태 / 발의일 : '26.05.27 / 의안번호 : 2219074

3-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 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 적으로 차단되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자원 기반을 넓히고, 법인·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각 목 신설,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04

국내정책

정보이슈

4-1. AI 법령 비서 서비스 개시...공무원 행정 속도 높인다

- 법령·행정규칙·판례 30만 건 가까운 데이터... 공무원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 기대

-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 등을 기반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 행정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질의에 답변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다. 법령과 행정규칙 약 24만 건, 대법원 판례 6만 건을 비롯해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도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5만여 건까지 학습 데이터에 반영해 높은 수준의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란?
(법제처) 법제 지식 +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전자정부 기술력
→ 공동 개발
-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정책 업무 → 법적 질문 → AI 검색 종합 → 검토 지원
 - ※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며, 공무원의 중간 검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AI 법령 비서는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모든 공무원이 온AI 실험실을 통해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 2026년 7월 14일부터 시범 서비스 개시!
 - 대법원 판례
 - 법령 및 행정규칙
 - 5개 시도 자치법(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 법령데이터 관련 총 24만 건
- 접속 URL : 행정망(<https://chat.ai.go.kr/>)
 - ※ 접속불가 시, 기관의 방화벽 정책을 확인바랍니다.

4-2.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단, 부정수령 제재조치는 강화돼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회만 부정 수령해도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상한을 폐지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한다.
-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4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e-사람,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 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한다.

4-3.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미성년 자녀 2명 시 10%, 3명 이상은 20% 할인
-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확 바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렌트·리스 차량부터 다자녀 가구까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확대 및 다자녀 가구 할인 신설 소식을 알리고 신청 방법을 안내함.

[확대] 장애인·유공자 혜택 강화

기존: 본인 소유 차량 **[확대]** 렌트/리스

1년 이상 임차·대여(렌트·리스) 차량까지 혜택 확대!

- 독립·국가 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100% 감면**
-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50%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할인

20% 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주말·공휴일)

10%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주말·공휴일)

[주의] 한국도로공사 구간 한정
(민자고속도로&연계운행 할인 제외)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

4-4. 학교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국고 지원받는 재학생과의 차별 해소

○ 주요내용

: 수능 모의평가(6월, 9월)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 최대 2회(회차당 1만 2천원)응시료 전액 지원

※ 수능 모의평가 응시 신청 후 청소년 1388(1388.go.kr)에서 응시료 지원 신청

- 필요 서류 : 당해연도 수능 모의평가 수험표, 예금주 통장사본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제도 시행 전 -> 재학생만 국고 지원

: 제도 시행 후 -> 학교 밖 청소년도 전액 지원

○ 기대효과

: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도움

○ 사례

: 최OO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건강 문제로 자퇴하고 지금은 혼자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재학생 친구들은 학교에서 모의평가 응시를 무료로 처리해주는데, 최씨는 혼자 12,000원씩 납부해야 했다. “별 것 아닌 돈 같아 보여도, ‘나는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공부 의욕을 꺾었다”고 말했다. 2026년 6월 모의평가 부터 응시료를 신청하면 통장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 씨는 6월·9월 두 번 모두 응시하며 실력을 점검하고, “이제 학교를 안 다녀도 내가 차별받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05

국외정책

정보이슈

5-1. 예산을 끌어오는 지방의회의 기술

- 덴마크 칼룬보르, 기업 간 자원 순환으로 만든 산업 공생 모델
- 폐기물이 돈이 되는 산업 생태계

○ 쓰레기 처리 비용을 수익으로 바꾸다

- 칼룬보르의 실험은 거창한 환경 정책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한 기업의 폐기물이 다른 기업에는 필요한 원료가 될 수 있다는 발견에서 시작되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원료 구매 비용도 낮출 수 있다면 기업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 연간 수백억 원을 아끼는 순환 구조

- 칼룬보르 모델의 힘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이 산업 공생 시스템은 매년 약 35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연간 약 63만 5,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해마다 36억 리터의 물과 1억 kWh에 이르는 에너지를 아낀다.

○ 규제가 아니라 신뢰가 만든 시스템

-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정부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력했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서로의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비용과 편익을 나누며, 새로운 자원 흐름을 발굴하는 협력 체계가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됐다.

○ 한국 산업도시에 주는 시사점

- 한국에도 칼룬보르와 닮은 조건을 가진 울산, 포항, 여수, 군산 등 많은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양의 열, 물, 부산물, 폐기물이 발생한다. 폐기물은 행정이 처리해야 할 부담만이 아니다. 잘 연결하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자원이 된다. 산업도시의 미래는 더 많은 고장을 짓는 데만 있지 않고, 이미 있는 공장들이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순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